

특화은행 리스크 부각... 금융당국 '신규 플레이어' 변수로

특화은행 건전성 우려 커져 '충청지방은행' 좌초 가능성 "리스크 관리 강화 우선 돼야"

미국 실리콘밸리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면서 '특화은행'과 충청지역 지방은행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지방은행 설립 모델이 최근 연이어 파산한 SVB 등 미국의 특화은행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리스크 관리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은행 경쟁 촉진을 위한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은행이 수행 중인 업무범위를 세분화해 특화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최근 미국 은행의 파산 사태로 사실상 특화은행 도입이 늦춰질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지난 2일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파산한 미국 SVB가 벤치마킹을 할 만한 주요 해외 사례 중 하나로 언급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SVB가 별도 인가를 받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 1983년 설립, 본사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 자산 2090억 달러(12월 말 기준 미국에서 16번째)
- 2023년 3월 8일 미 국제 자산 매각하며 18억 달러 손실
- 3월 9일 추가 폭락,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발생
- 3월 10일 증자 유치 실패, 파산선고

SVB의 영업구조가 금융긴축 과정과 맞물려 발생

- 거액 기업예금 위주 자금 조달 (예금자보호대상인 아닌 예금이 87.6%)
- 자산 대부분을 장기 유가증권(총자산의 56.7%)에 투자
- 금리상승으로 예금조달비용 증가 채권 평가손실 발생
- 예금인출 증가하자 유동성 문제 봉착

자료: 금융감독원 /뉴스시그그래픽

은 특화은행은 아니지만 사실상 고위험 벤처기업만을 고객으로 상대한다는 점에서 특화은행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모범사례로 꼽힌 SVB가 정책금리 인상을 못 견디고 파산하면서 당분간 금융당국이 특화은행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다.

이에 따라 TF에서도 SVB파산 사태를 계기로 소규모 특화은행의 선부른 도입보다는 리스크 관리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특화은행의 경우 정확한 신용평가에 대한 어려움으로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SVB 사태로 특

화은행 도입은 은행 경쟁 촉진 방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SVB사태로 특화은행의 건전성 우려가 커져 이를 국내에 도입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당국에서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선불리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 특화은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중은행보다 자본금 규제 등이 완화되어 있지만, 사실 특정 산업이 무너지면 특화은행도 동반 파산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턱이 높아지면 수익성이나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생길

수 있어 실제 도입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또한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 지방은행 또한 SVB를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22일 '제1차 은행설립 추진위원회 및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SVB 모델을 차용한 '한국벤처투자은행(가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SVB가 파산하면서 정부가 충청은행의 설립을 늦출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한 기존에 대전기업금융중심은행과 충청 지방은행이 분리 설립될 계획이었지만, 최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충청금융지주' 설립 계획에 따라 두 은행을 하나로 묶어 설립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윤창현 의원은 대전기업금융중심은행이 향후 충청권 지방은행의 업무를 흡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전기업금융중심은행이 몸집을 불리며 결국 충청권 지방은행의 일반 업무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할 것이라 분석이다.

한편,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1월 미국 출장 중 SVB를 방문해 대전투자청·은행에 대한 자본출자 및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만간 정식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SVB 파산으로 향후 일정은 불투명해졌다.

금융당국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우려를 적극 반영해 대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빚어졌다고 투자은행(IB)을 없앨 수는 없었다"며 "시중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한국벤처투자 "SVB 주식 미보유, 모태·자펀드 직접적 영향 없어"

일부 수탁사 활용... 예보 이내 예치 "자펀드 투자기업 실시간 모니터링"

중기부, 국내 스타트업 점검 "아직까지 확인된 피해 없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와 한국벤처투자가 출자한 글로벌 자펀드는 SVB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83년 세워진 SVB는 미국 실리콘밸리 지역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에게 융자 및 투자, 벤처캐피탈(VC) 펀드의 수탁·출자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회사로 88년 당시 나스닥에 상장한 바 있다.

14일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SVB는 모태펀드와 직접 거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벤처투자가 출자한 글로벌 자펀드 일부만이 SVB를 수탁사로 활용했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자펀드 대부분이 예금보험한도 이내에서 예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이번 SVB 파산 사태가 한국벤처투자 출자 글로벌 자펀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다만 글로벌 자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피해 사항은 추가 확인중이며 관련 부처와 적극 대응해 피

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스타트업계의 SVB 관련 영향에 대해 VC 등을 통해 종합적인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협회들을 통해서 SVB와 거래해 손해를 볼 만한 스타트업들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파악된 건 없다"고 말했다.

VC업계와 스타트업 관련 협회와 단체들에서도 이와 별개로 미국 기반 국내 스타트업들의 SVB 이용 여부와 예치 규모,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조사를 진

행중이다.

SVB 파산이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시각이다.

미국 정부의 '지급약속'에 스타트업들의 예금도 포함돼 있고, 보험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보증기로 하면서다. 현재 SVB에 요청하면 모든 예금액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SVB 파산이 가뜰이나 하락하고 있는 투자시장의 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스타트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적겠지만 미국의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내에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면서 "국내 VC가 해외 벤처기업,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도 투자 대상 스타트업의 거래은행 분산 등 위험관리 강화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스타트업 민관 협력 네트워크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지난 2월 스타트업 총투자 건수는 92건, 투자금은 2952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의 경우 투자 건수 140건과 비교하면 48건이나 줄어든 수치다. 특히 투자금액은 지난해 2월의 1조1916억원에 비해 75.2%가 감소하는 크게 위축됐다.

/김승호 기자 bada@

추경호 "금융기관 합동점검 체제 가동... 필요시 시장 개입"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경각심 갖고 상황 예의주시 할 것"

정부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관련 필요시 안정 조치 등 시장 개입 여부를 시사했다.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 회의에서 "현재 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SVB 사태와 관련한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미 재무부·연방준비제도(Fed) 등의 주요 조치사항을 점검

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SVB 사태를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 긴축이 지속되면서 취약 부문의 금융 불안이 불거져 나온 경우로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제 시장은 안전자산 선호가 강하고, 글로벌 긴축 전망이 약화하면서 국제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미국 등의 대응 조치 이후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코스피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다수인 코스닥도 소폭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금융기관은 자산·부채 구조가 SVB와 상이하고 유동성이 양호해

일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다"며 "국내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 및 4대 공적연금, 한국투자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투자기관 등의 관련 은행에 대한 투자 위험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 체제를 24시간 가동해 국내외 시장 상황을 실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 시스템 전반의 취약 요인을 지속 점검·보완하겠다"며 "필요시 관계기관 공조 하에 신속히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 부총리는 "현 단계에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세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아직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까지 겹치면서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와 관계기관은 한시 긴장의 끈도 놓치지 않고 당면한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 포함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위원장, 이승현 한국은행 부총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 경제·금융 수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